

박근혜 '사면' · 한명숙 '복권'

문 대통령, 임기 말 국민 통합 고려 특별사면 단행 "국민통합·포용 절실... 사면 반대자 이해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박근혜 한명숙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한다"며 추후 사면 접근 방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 위원회 1차 전체회의 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 21일 열린 2차 회의 때 기류 변화가 생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올해 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할 때만 해도 출근 가능성

을 일축했다. 최근까지도 "검토한 바 없다"며 사면론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가 만기 출소했다.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됐다가 이번에 특별 복권됐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로 인한 피해를 한 전 총리가 입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확정 판결 당시 "진실과 정의가 인권의 대가라 참담히 무너졌다"며 "안타까움과 실망 너무 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가능성을 아주 닫지는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하락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유명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충원"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군 인력 전문화 절실" 스마트 강군 · 장병여건 개선 등 국방공약 제시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 2027년 200만원 ↑ 보장" 첨단기술 투자 · 핵잠 건조 · 우주사령부 창설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10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무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무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집병의 규모는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무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명을 각각 충원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시설경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등은 민간에 위탁하고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40만 상비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무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도 전역 시 사회 정착을 돕는 지원금과 아카데미·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 강군 건설, 병사월급 현실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를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인공지능·초연결·초융합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추진, 북한 SLBM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우주로 작전영역을 확대해 위성체계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월급과 관련한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 생활관 2~4인 소인실 전면 개선, 군 급식 수준 획기적 향상, 학점 인정제 등을 추진하고 부사관·장교 숙소 개선과 독립적 영외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군 정예화 집행, 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박종진·김운용·홍인권 육군대장과 모종화 육군중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상호협력 | 전북도-도의회, 인사운영 협약

전북도의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양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인사 교류가 시행된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시험 위탁수행 기타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한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상호 협력해 신뢰와 화합,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유호상 기자

철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납품 '전북 유일'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팔복동 산단 소재 '현대특수금속' 방문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일환...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 도모해야"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3일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여덟 번째 일정으로 전북 유일 알루미늄 납품 기업인 '현대특수금속'을 방문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특수금속은 창립 10여 년 된 중견 기업으로, 철보다 가볍고 탄소보다 값싼 알루미늄을 주 품목으로 취급하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다.

우 전 부지사는 "금속 재 단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현대특수금속처럼 매출이 오르고 발전하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기업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김 대표이는 "현재 팔복동 산업단지는 '못 시는 동네', '버스 종점'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낙후산단으로 낙인찍혀 있다"면서 "전주의 모태산업인 섬유나 물류업 등이 들어올 수 없는 등 규제도 많고 시장이 작다. 주차공간도 없어 그나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우 전 부지사는 "팔복동 산업단지는 울산과 구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조성된 공단이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일어난 구로에 비해 팔복동 산단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팔복동 산단을 서울 구로처럼 비워주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은 도모해야 할 때다. 산단 자체도 공공용지로의 변화에 적극 동참해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융·복합 시스템 선도 기업이 나와야 하고, 원천적으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운덕(전주시 갑 국회의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지난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 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청년들이 바라는 전북 대선공약은?

김운덕 의원, 청년들과 줌 회의 열고 청년 정책 발굴 나서 "중기 임금체계 개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김운덕(전주시 갑 국회의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지난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 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재(24)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김 의원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김운덕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3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정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차산업 대거입 개역을 통해 협력업체 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해야 하며, 취업제한사실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